

“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

민주노총, 128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개최... “삼성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본격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128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노동헌법 쟁취,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시대,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이번 세계노동절 대회에 수도권대회 2만여 명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한국 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을 통해 ▲구조조정: 정리해고 중단, 해고자 복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성 평등 실현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공공성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사회 건설 ▲재벌개혁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항구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전쟁 위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의 일터에서 평화의 기운이 퍼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56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의 중심산업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서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비정규직부터 쫓아내고 있다”라며 “이에 맞서 완강히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무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회 대표지회

장이 노조를 대표해 연단에 올랐다. 나두식 지회장은 “4월 17일 직접 고용과 노조 할 권리 등 삼성과 합의를 기점으로 삼성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본격 시작한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 등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광화문 너거리를 거

쳐 종로 41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저지, 총고용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 할 권리’라고 쓴 배와 자동차, 스피너 모형 등의 팻말을 들고 행진해 서울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노동조건 개선 대책 등을 요구하며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노동조합’ 설립을 선포했다. ‘구역역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망,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적 압박 사망, 이마트 무빙유크 수리 중 사망, 제주 현장실습 중 협착사고 사망’ 사고 당사자는 모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다.

“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조사, 재벌·검찰개혁 지표다 ”

유성기업 아산지회·영동지회 검찰 규탄대회...검찰, 기소권 남용 유성기업·현대차 도와

공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동지회가 5월 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조사 보류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련한 검사들을 지금 당장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열두 개 사건 기운

데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노동관련 사건으로 유일하게 선정했다. 검찰과과사위원회는 유성기업 사건 관련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창조컨설팅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류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검찰은 현대차, 삼성 재벌이 저지른 사건 앞에서 유독 작아진다. 정권이 바뀌

고 남북정상회담까지 했다. 하지만 이 정권에서 노동자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없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검찰과과사위원회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조사 여부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과 검찰개혁 의지를 시험대라고 지적하고, 보류를 철저히 철회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기타결은 현장조합원의 바람이다”

현대자동차지부 2018년 단체교섭 시작... “금속노사공동위는 견해차 좁히는 기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5월 3일 오후 울산공장 이반테룸에서 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인사 앞에서 “지부 사전 교섭 회의에서 회사가 세 차례 보낸 공문을 봤다”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와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조합법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교섭대상이며,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구조조정 대상도 쟁의와 교섭 의제에 포함하고 있다”라며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게 상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관해 “산별교섭 전 단계가 아니다. 기업 단위의 소모적인 임금체계 논의 틀을 뛰어넘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해법을 찾기 위한 의제를 다루는 기구, 견해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좁히는 기구로 이해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상견례를 시작하며 “2017년 단체교섭 해를 넘긴 지 불과 4개월 만에 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지부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압축 교섭을 통한 빠른 의견접근으로 하계휴가 전 교섭 마무리를 희망한다”라며 “조기타결은 현장조합원의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하부영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지부는 올해 단체교섭에 임금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해소 하후상박 연대임금요구와 납품단가 등에 관한 특별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별도요구로 제시한 대로 1차 납품업체의 통행세, 중간착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다”라고 지적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자동차가 1차 납품업체에 주는 납품단가에 포함된 인건비의 8~15%가 통행세로 중간착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1차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중간착취행위를 막는다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23차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당한 추가지원 없이 보전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런데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 조합의 요구에 대해 “납품단가를 어떻게 올릴지 모호하고 고민된다”라며 “부품가가 올라 현대자동차가 조달처를 해외로 돌리는 상황이 되면 결국 국내 부품사의 고용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차 교섭을 ‘경영 설명회’로 열기로 하고, 주 2회 연속교섭 원칙을 합의했다.

백은호 현대자동차 수석부지부장은 상견례 마무리 발언에서 “회사가 자사주 1조 원 소각을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대주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피땀 흘려 순이익을 쌓은 조합원에 대한 친화 정책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격양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교섭에 앞서

본관 앞에서 ‘현대차 재벌 3세 경영세습과 1조 원 자사주 소각 규탄 대회’를 열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핵심 요구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과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이다.

현대자동차지부는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2일 4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 사업장 7.4% 146,746

원 ▲현대차 기아지부 5.3% 116,276원 등 2.1% 30,470원 차등 임금인상 요구안과 묶음 요구안인 ▲일방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최초 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 여부 노사합동 조사 ▲인상률 차이 2.1%(30,470원)는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률에 반영 등을 기초로 다섯 가지 특별요구안을 결정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다섯 가지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은 ▲현대차 새내청 비정규직 임금인상 7.4% 금속노조 산별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인상 ▲현대차 새내외 하도급 물량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방지 대책 마련 ▲현대차 납품계약 현 시금당 임률 18,000원이라면 7.4% 19,332원으로 인상(현대차 정규직의 80% 보장)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현대차 1차 납품계약 업체 통행세(중간착취) 8~15% 근절과 2~4차 하청업체 부당한 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 대책 마련 ▲최초 납품계약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수립 등이다.

지부는 해고자 원직복직과 고소 고발, 손해배상 가입류 철폐,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